

## 파고 높아지는 남중국해, 한일의 선택

배극인 동아일보 동경지국장

11월 19일 새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한 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키에 여사를 가운데 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웃는 모습이였다. 세 명 모두 필리핀 전통의상 차림이었다. 사진이 올라오자 “일미 밀월을 상징하는 최고의 사진이다. 일본에 좋은 일이다”는 찬사의 댓글이 이어졌고 7734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격세지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 부부의 이런 모습은 불과 지난해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4월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국민 방문 요청을 수용은 했지만 부인 미셸 여사를 동반하지 않았다. 방문기간 내내 표정도 굳어있었다. 일본 방문 후 곧바로 한국에 들러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가 극적으로 바뀐 배경에는 일본의 끈질긴 ‘미국 추종’이 있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끝까지 가입하지 않아 미국과의 의리를 지켰고 AIIB에 맞서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도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자

쳤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미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에 대항해 주변국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재정 위기로 매년 국방예산을 줄여야 하는 처지여서 독자적인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고맙게도 미국의 짐을 나눠질 중심 국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 일본이다. 내년 봄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가 발효돼 실질적인 도움도 가능하게 됐다.

일본이 미국을 위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대만 서쪽 남중국해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면 다음 공략 수순은 대만 동쪽 동중국해라는 것이 불보 듯 뻔하다. 동중국해 한가운데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다표위다오·釣魚島)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중국해가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0% 이상을 실어 나르는 길목이라는 점도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남중국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중국의 행동을 용인할 것인가. 또 중국은 미국에 맞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모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

먼저 중국에 있어 남중국해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놓칠 수 없는 해역이다. 중국군의 국방전략 변화 때문이다.

과거 중국군의 국방 전략은 연안 방어였다. 하지만 연안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중국은 미국의 해·공군력을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오른팔이었던 류화칭(劉華清) 당시 해군 제독은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의 안보전략을 다시 짜는 이른바 ‘열도선’ 개념을 내놓았다. 원양 방어로의 전환이다.

그 내용은 먼저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를 잇는 가상의 선(제1 열도선)을 그은 뒤 중국에서 봐서 그 안쪽의 제해권을 2010년까지 장악한다는 것이다. 제1 열도선 안에는 남중국해와 대만이 포함된다. 이어 조금 더 먼 바다인 오가사와라제도-사이판-괌-파푸아뉴기니를 잇는 가상선(제2 열도선) 내부의 제해권을 2020년까지 장악한 뒤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 체제를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제1 열도선 안에서는 미국 함대의 접근을 차단하는 A2(Anti-Access·접근 저지) 전략을, 제2 열도선 안에서는 미국 함대의 자유로운 작전을 방해하는 AD(Area Denial·영역 거부)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는 난사(南沙)군도는 제1 열도선 내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대로 꼽힌다. 대만 유사시 등에서 미국과 맞섰을 때 항공모함 전력이 부족한 중국 입장에서는 인공섬이 일종의 ‘불침 항모’ 역할을 하게 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를 선포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본토 방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특히 하이난 섬 쑤야 잠수함기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잠수함 전력은 핵 역지력과 직결된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싣고 태평양 수면 밑을 몇 개월씩 돌아다니는 원자력 잠수함은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9월 29일 쑤야 기지를 출발해 남중국해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 094형 잠수함은 사거리 8,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쥐랑(巨浪)-2를 장착하고 있다. 094형 원자력 잠수함이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면 핵탄두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쥐랑-2를 장착한 094형 잠수함은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될 수 있다”며 “이는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이 어떤 공격을 당해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확실하다. 특히 미국이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한 F22 랩터는 2006년 미 모의연습 때 F15기 144대를 혼자서 격추했다. ‘투명인간’으로 불릴 정도로 탁월한 스텔스 능력 때문이다. 지금도 혼자서 10기 정도의 제4세대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어 제공권에서는 아직 중국이 게임이 안 된다.

다만 미국의 경계에도 중국의 남중국해 우위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사거리 900~1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동평-21D는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져 있다. 또 동평-21D의 파생종인 동평-26은 사거리 3000~4000km로 미국의 태평양 전략기지인 괌도 타격할 수 있다. 이들 미사일의 등장으로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하던 미 해군 전력은 위협에 노출됐다. 제1 열도선의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제2 열도선의 괌 기지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복수라도 하듯 11월 26일 30여년만의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눈 군구(軍區) 체제를 4대 전략구로 개편하고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미국식 연합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초음속 전투기 등 미군 전력에 대한 대항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격돌은 앞서 지적했듯 주변국에도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필리핀 등 남중국해 주변국에 대한 군 장비 지원을 늘리는 한편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책정했다. 역대 최대 액으로 4년 연속 증액이다. 일본과 호주, 인도를 잇는 중국 포위망 구축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22년 만에 미군을 다시 받아들일기로 했고 대만과 미국의 첨단무기 이전 교섭도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일본은 아직까지는 영거주춤한 자세다.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열린 22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군이 남중국해에서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여러 선택치를 염두에 두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틀 후인 24일 나가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하와이에서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과 만나 남중국해 공동훈련을 계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엇갈리는 듯 보이는 일본의 성법을 정리하자면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간접적인 중국 압박에는 동참하지만 직접적으로 중국과 맞부딪히는 상황은 아직은 피하고 보겠다는 것이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당황해하고 있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동중국해에서의 미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는데 미국이 이를 빌미로 일본의 현재 허용 한도를 넘어서는 전방위적 '공헌'을 요구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현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가 거세지면 세계적 수준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전후체제' 탈피를 주장해온 일본 우파가 원했던 그림이 과연 이런 것이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 냉전'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중 격돌이 심화될수록 한국에는 "미국과 중국 중 한 쪽을 선택하라"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1~22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조로 볼 수 있다.

도쿄를 방문하는 국내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놓고 한국에서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만 신경이 곤두

서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남중국해의 격랑은 한반도와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지도를 보다 크게 펼쳐놓고 주변 정세를 판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중국해발 지각변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지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깊고 크다. **日本空間**